

북한의 권력과 북종의 정치에 대한

소고(小考):

북한 주민들은 왜 집단저항을 하지 않는가?

남근우*

| 목 차 |

- | | |
|-----------------------|-----------|
| I. 서론 | 배의 정당화 수단 |
| II. 왜 북종하는가? | IV. 결론 |
| III. 길들여진 북종의 권력구조와 지 |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지도자, 당, 체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지닌 개인적 차원의 불만들이 조직화되지 않는 이유를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확산이 반드시 개인적 차원의 불만, 좌절, 갈등 등을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는다. 시장화와 주민들의 집단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정치적 리더십이 시장화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그 변화를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권력이 어떻게 주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체제에 순응하는 자기감시적인 주체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강제력, 설득, 상징조작, 권위와 같은 권력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행위를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편재되어 있는 권력의 수단들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시장화가 체제와 정치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추동하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북한 주민들의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개인적인 불만과 좌절을 조직화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북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북종을 강제하는 권력의 수단들을 약화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 주제어: 권력, 복종, 집단행동, 저항, 권위

I. 서론

북한 사회에서는 왜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지 않는가? 본 소고(小考)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카프카(Kafka)의 『유형지에서』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바늘 찌르기’와 같이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집단적으로 외칠 수 없게 만드는 복종의 제도적 장치를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¹⁾ 붕괴된 현실 사회주의체제와 과거 억압적 통치의 역사적 경험에 비취볼 때 경제적, 외교적 위기상황에서 북한처럼 주민들의 저항 없이 공고히 권력을 유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조직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폭력성에 있다. 권력의 폭력성은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시켜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권력의 폭력성은 복종을 강제하기 위해 더 많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재정적, 인적 및 정교한 감시기제가 더욱 많이 요구된다. 반면에 권력의 폭력성 못지않게 ‘권력의 유혹’이 자발적, 무의식적 복종을 유도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권력의 장치들은 북한 주민들이 대체로 믿고 행동하는 하나의 습관으로 작용하여 북한 사회만의 정당한 문화로서 사회질서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통합이 유지될 수 있는 원인에는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복종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지배문화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지배문화는 주민들이 정치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지도자와

1) 이 글은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권력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권력에 어떻게 복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후속연구에서 진행한다.

당의 그것과 일치시키게 함으로써 체제와 지배자의 논리,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상징적 그물망이다.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은 북한의 지배문화가 만들어 놓은 생활양식과 정체성에 구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식과 정체성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억압적 강제기제가 그물망식으로 둘러싸고 있다(남근우 2014a, 166). 북한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지배문화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불만이 조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체제는 경제난과 대외관계의 악화로 불안정한 측면도 있다. 최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북한 사회의 내부적 불만과 인류가 밟아온 역사적 경험들에서 북한체제의 붕괴 혹은 변화를 예측한다. 북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체제변화와의 상관성을 추적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에서 시장화에 따른 사경제 활동의 증가가 국가통제와 집단주의의 약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초래해 체제전환의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조정아 외 2010; 이우영 2012; 조한범·황선영 2013).²⁾ 특히, 시장화로 인해 기존의 계층구조가 변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 불만이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이우영 편 2008; 박영자 2009; 홍민·박순성 2013).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 논의를 제외한 많은 연구들은 시장화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단기간에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다. 북한체제를 강력하게 지탱하는 억압적 강제기구 이외에도 주체사상,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침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규제하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문화가 갖는 기능에 주목한다(최봉대 1999; 권현익·정병호 2013; 남근우 2014b).³⁾

2) 북한급변사태 논의 역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불만과 갈등이 폭발할 경우 급속한 체제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제전환을 예측한다(박관영 외 2007; 이춘근·박상봉 2011; 조영기 외 2014).

3) ‘반디’라는 필명으로 국내에 소개된 『고발』은 북한 주민들이 체제의 억압과 통제

그러나 국가의 강제력과 사회통합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왜 체제에 대해 집단행동을 일으키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물론, 북한에서 저항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1960-70년대 공업화시기의 생산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과 갈등의 행위가 있었다(남근우 2010).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조정아 2011). 더군다나 체제비판 성향의 빼라, 낙서 등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반체제 행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 행위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채 개인적 차원의 소극적 저항에 머물러 왔다. 북한에서 개인적 차원의 불평과 불만이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경제활동의 확산과 시장에 기초한 경제정책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혹은 항상 수반하지 않는다(Dickson 2003, 12).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 따른 개인적 측면의 불평, 불만, 그리고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사람들이 은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화와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김정일의 사망, 그리고 2009년 화폐개혁 당시 주민들의 개인적인 불평과 불만이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집단적 비판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사경제활동의 형성과 발전이 정치변화와 민주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Rowen 1996; Hu 2000).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 그러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치적 리더십이 경제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때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둘째, 습관화된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권력이 어떻게 주민들의 삶에 침투해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정치적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기제가 북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고발한 소설이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들이 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북한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반디 2014).

한 사회를 오랫동안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북한 주민들 자체의 역량만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국가와 주민을 선대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제도개혁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북한 제도의 구조적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초래해 제도변화나 체제변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켄베리(Ikenberry 1988)가 지적했듯이, 새롭게 형성된 제도는 환경변화에 기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 제도로부터 제약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그림자(shadow of the past)’이다. 즉, 한번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사회적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제도 혹은 구조의 형성은 기존 제도가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제도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북한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제도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각의 틀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도록 제약한다. 북한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한다.

시장화와 주민들의 집단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권력의 측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시장화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그 변화를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정치적 리더십은 시장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다양한 권력의 기술들을 고안하여 현실에 적용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주민의식을 변화시켜 언젠가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당위론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비사회주의적 이탈현상과 주민들의 불평, 불만, 분노가 급변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권력의 기제가 어떻게 주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체제에 순응하는 자기감시적인 주체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의 실천자로 등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II. 왜 복종하는가?

집단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은 개인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맞춘 거(Gurr 1970)의 상대적 박탈감이론, 데이비스(Davies 1962)의 J 곡선혁명이론, 스멜저(Smelser 1962)의 집단행위이론 등이다. 이 이론들은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기대가 실제 현실에서 달성되지 않을 때 혹은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개인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여 집단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본다. 스멜저의 경우 공유된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재구성하려고 할 때 집단행동이 전개된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의 경제난과 시장화의 확산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확산되고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사회적으로 공유됨에 따라 집단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개인들이 가진 좌절, 불만, 불평의 증가가 반드시 모든 사회에 집단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반면,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심리적 측면에서 개인이 갖는 불만, 좌절감, 분노,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등은 집단행동을 촉발시키는 일차적인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가?

첫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여하려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올슨(Olson 1965)은 이 점을 사람들의 ‘무임승차’ 경향이라고 지적한다. 집단행동을 통해 얻게 될 집단재(collective goods)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당 조직의 감시와 조직생활을 통해 일상의 모든 면을 통제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설사 불만이 조직화된다고 해도 집단행동이 실패할 경우 받게 될 처벌, 즉 구금, 고문, 정치범수용소 수용, 처형 등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무임승차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집단행동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표출해야 할 불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한 불만인지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 사회에 남한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유통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남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모험이다.

셋째, 북한에서 지도자의 권위와 존재에 대한 집단적 신뢰는 여전히 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똑같이 1972년에 헌법을 개정해 유신체제와 주석체제로 종신집권을 추진했지만, 남한의 독재체제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고 1987년 민주주의 혁명으로 종식되었다. 반면에 북한의 독재체제는 아무런 저항에 직면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복종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들의 업적에 대한 조직적 비판이 없었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조직적 저항이 없었다는 점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북한은 장성택과 현영철, 리영호 숙청에서 보듯이 권력 엘리트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부재하다.

무임승차, 정보 부족,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집단적 신뢰는 북한 특유의 유일영도 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남근우 2011). 북한에서 유일영도체계는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388). 이러한 유일영도 문화는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들의 행위와 사고의 준거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유일영도 문화의 특성상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며 지도자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일영도 문화가 지속되고 균열되지 않도록 정교한 권력의 수단들이 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다.

결국, 무임승차, 정보 부족,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집단적 신뢰는 북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역량 부족과 참여를 유도할 세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집단행동은 주민들이 지닌

불만, 분노, 좌절감 등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요인보다는 그러한 불만을 조직화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북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차적으로 개인 수준에서의 좌절과 불만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이러한 공유가 집단행동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는 구조적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McCarthy & Zald 1977, 1212-1241). 물론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북한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회와 더불어 주민들의 능력, 신념 등 역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립셋(Lipset 1959), 알몬드와 베바(Almond and Verba 1963)는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가져온다고 했으나, 중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이 반드시 민주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 점은 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주민들의 역량이 결부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 스카치폴(Skocpol 1989)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올슨은 행위자에게 인센티브 혹은 개별재(individual goods)를 제공해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주체나 조직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 실체에 대한 면밀한 추적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공포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해 실패했을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집단행동의 성공으로 받게 될 인센티브와 개별재에 비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다.

Ⅲ. 길들여진 복종의 권력구조와 지배의 정당화 수단

권력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종을 살펴보자. 카프카(Kafka)는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권위적인 수동성을 『유형지에서』라는 소설에서 극적으로 보여준다(카프카 2014). 수많은 바늘로 구성된 처

벌기구의 날카로운 ‘바늘’ 하나하나는 사적 일상을 통제해 저항이 일어나지 못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들을 의미한다. 권력은 파편화된 구속수단을 일상에 입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권력의 지속과 안정의 기반을 확보한다. 그리고 권력은 일상에서의 사적인 경험과 학교, 사회에서의 집단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되면서 권위적 수동성도 후대에 전승된다. 저항의 행위를 제약하는 권력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며 다양한 모습으로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규제한다.

라스웰(Lasswell 1950)은 권력을 행위주체가 타 행위주체의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권력은 타자의 행위와 의사를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힘이다. 이러한 권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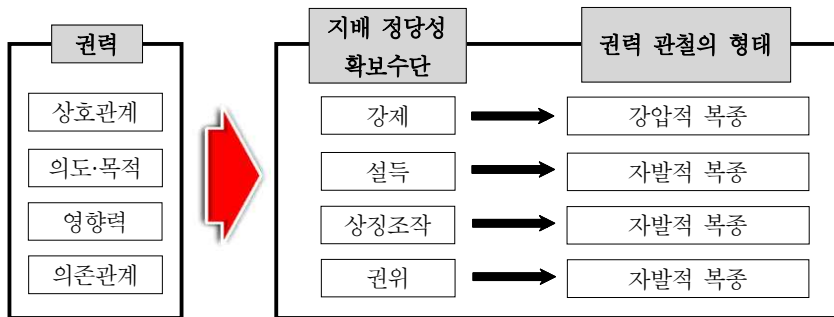
첫째, 권력은 행위주체와 타 행위주체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발생한다. 권력이 타자와의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권력은 고정불변의 정태적이고 대상화된 실체를 지닌 ‘무엇’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푸코(Foucault 1996; 1999)는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가정, 학교, 군대, 감옥, 병원 등 우리 일상의 도처에 규칙과 규율로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권력에는 권력을 지닌 행위주체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Etzioni 1975, 344). 셋째, 권력을 가진 행위주체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가지지 못한 타 행위주체를 강제하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Lasswell & Kaplan 1950, 76). 이를 통해 권력을 가진 행위주체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넷째, 권력은 권력을 갖지 못한 행위주체가 권력을 지닌 행위주체에 의존하는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권력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타 행위주체의 지지와 복종을 확보해야 한다. 권력의 유지와 지속성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와 복종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북한의 지도자와 당이 지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면 시장화와 경제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정권과 체제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집단행위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을 갖고 있는 행위주체는 대중의 복종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통치수단을 동원한다. 지배를 정당화하는 통치수단은 푸코도 말했듯이 일상의 도처에 편재되어 있다. 이것은 카프카의 ‘바늘 찌르기’처럼 복종의 환경을 조성하는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들을 의미한다.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들은 강제력에 의한 두려움의 복종뿐만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힘까지도 포함한다.

북한의 지도자와 당이 이러한 권력의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다면 시장화와 경제정책의 변화가 초래하는 변화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력의 수단들은 체제유지와 권력안정의 기반으로 작용해 경제적 변화를 지도자와 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권력에 의한 지배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데 크게 강제력, 설득, 조작, 권위의 형태로 나타난다(Wrong 1988, 24). 강제력이 두려움을 통한 강압적 복종을 유도하는 권력기제라면, 설득, 조작, 권위는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권력의 기제이다.

<그림 1>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수단과 복종의 유형



1. 강제력

북한 주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는 권력 중에서 공포심을 유발해 비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권력의 수단은 강제력이다. 강제력은 인류 역사에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다. 강제력은 권력을 지닌 행위주체의 의지와 목적을 두려움, 공포, 위협을 통

해 관찰되도록 타 행위주체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다. 북한에서 강제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권력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는 물리적 강제력과 물리적 강제력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일상의 사적 공간을 위계질서화된 조직생활의 규율로 통제하는 정신적 강제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물리적 강제력은 권력이 금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투옥, 구타, 고문, 처형과 같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나, 벌금, 압수, 몰수와 같은 소유물에 대한 강제처분을 행사함으로써 질서위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을 유발해 질서에 순응하게끔 강제한다. 물리적 강제력은 신체처벌과 소유물에 대한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처벌받는 자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까지 구속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물리적 강제력은 지도자와 당의 지시, 명령, 결정, 방침 등에 대한 위반행위와 체제저항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신체에 대한 처벌로 나타난다. 위반행위 및 체제저항행위는 형법, 형법부칙, 그리고 각종 포고문, 지시문 등에서 제시된 범죄유형에 따른 형벌로 처벌된다.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의 기본형벌과 선거권박탈형, 재산 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부가형벌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두려움의 공포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벌은 사형이다. 사형방법은 ‘판결, 판정집행법’ 제32조에 “총살형 등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장명봉 편 2013, 184). 사형은 지도자와 체제 및 당에 도전한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형을 직접 목격한 사람과 전해들은 사람에게도 공포를 심어주는 효과를 거둔다. 물리적 강제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범죄행위에 대한 자백이다. 형벌이 집행되기 이전에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은 위반행위를 범한 행위자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처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처벌받는 자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처벌은 지도자, 당, 그리고 체제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을 확산시킨다.

2012년에 개정된 북한의 최신 형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국가전복음모죄(60조), 테러죄(61조), 조국반역죄(62조), 파괴암해죄(65조), 민족반역죄(68조) 등 당과 체제에 저항하는 행위와 더불어 마약 밀매 및 밀수(208조), 고의적 중살인죄(266조)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된 형법 부칙(일반범죄)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더욱 확대해 놓았다. 형법 부칙 23개 조문 중 16개 조문이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 형법에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도 사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부칙 제23조의 경우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목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군다나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4』에 의하면,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도록 명시한 형법 6조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고문과 지시문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사형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통일연구원 2014, 94-95). 이와 같이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처벌은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북한에서 강제력은 물리적 강제력과 함께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조직생활의 규율에 의한 통제도 병행되고 있다. 물리적 강제력이 폭력을 통해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유발한다면, 규율은 조직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스스로 평가하고 특정한 행위가 옳지 않다는 자기감시적인 의식을 심어준다. 최근 사경제 영역의 확산으로 규율적 조직생활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규율적 조직생활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공동 작업이나 김일성, 김정일 동상 및 체제 선전물에 대해 참배를 거부하는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 따돌림, 눈치 보기, 죄스러움, 고립(소통단절, 소외, 무관심) 등이 작용한다. 권력에는 비도덕적 행동과 사고를 그만두게 하거나 혹은 멈추게 하여 집단주의 생활에 복귀하도록 도덕적으로 자극하는 감시와 통제의 권력도 은폐되어 있다. 도

덕적 보복이 동반되는 권력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은폐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남근우 2014b, 166-169).

규율은 북한 주민들이 소속된 조직의 질서에 순응하게끔 일탈행위를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 중심의 처벌은 개인의 행동을 타자와 비교하게 하여 옳은 행동과 옳지 못한 행동을 구별 짓게 함으로써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설득과 상징조작

강제력은 물리력과 조직생활의 규율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와 정신을 굴복시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통치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상 어느 지배체제도 강제력만으로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제력만을 이용한 통치는 사회 내부적으로 불만을 증가시켰고 정치적 갈등과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음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러셀(Russell 1938, 69-72)은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는 강제력을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벌거벗은 권력(naked power)’이라고 말한다. 북한 주민들의 권력에 대한 복종은 권력의 강제력 이외의 또 다른 권력의 수단들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야 한다. 강제력이 두려움과 조직생활의 규율에 의한 복종을 강요하는 권력의 수단이라면,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권력의 수단은 설득과 상징조작이다.

설득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의식적인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영석 2008, 29). 설득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행위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권력을 갖지 않은 행위자는 강제력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행동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강제적으로 제약받는다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지배의 정당성을 설득으로 확보할 경우 지도자, 당, 그리고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지기반을 얻을 수 있다. 설득은 주민들이 당과 지도

자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호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설득을 통해 개인의 자기희생과 헌신의 덕목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권력의 의도와 목적을 실천하게 하는 명분을 갖는다.

북한에서 대중설득은 당 사업의 기본으로서 ‘사람과의 사업’으로 표현되는 ‘조직정치사업’으로 나타난다(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1620). 사람과의 사업은 교시, 각종 구호, 모범 창조, 문화예술, 언론 및 미디어 등을 통해 설득되고 학교, 근로단체, 인민반 등에서의 정치학습의 생활화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설득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조직생활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총화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도자, 당, 체제의 의도와 목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무조건적인 이행과 복종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민반장을 비롯한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등 정치사회 조직의 간부들이다. 이들은 생활총화와 강연회 등을 주관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지도자와 당의 지시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일반 주민들에 비해 비교적 높다(남근우 2014b, 184). 생활총화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조직생활과 타자의 생활에 대한 도덕성을 공개하고 도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장소이다. 주민들의 조직생활은 조직생활카드에 기록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체제비관행위를 하기 어렵다.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설득의 방법은 상징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리엄(Merriam 1964, 109-118)이 상징조작을 미란다(miranda)와 크레덴다(credenda)로 구분한 방식을 통해 북한의 권력이 어떻게 상징조작을 통해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지 살펴보자.

미란다는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는 상징조작으로서 ‘동일시의 상징’이라고 한다. 미란다는 행위자들이 지도자를 정서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게 유도함으로써 집단 내의 구성원과 지도자가 ‘하나’라는 동일의 일체감을 심어주는 방식이다. 북한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신화적 존재인 김일성과 이미지가 동일시되고 이를 통해 지도자의 권력은 정당화된다. 그렇기 때

문에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김일성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지도자의 존재를 정서나 감정에 호소할 때 사용되는 것이 상징물이다. 북한에서는 지도자, 당, 체제, 국가와 관련한 각종 기념일, 기념물, 기념관, 의식행사, 동원 및 각종 선전구호, 영화·소설·공연에서 등장인물 등이 주는 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지도자, 체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의 '5대 혁명가극'인 <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은 과거 항일빨치산 투쟁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현실과거로 끊임없이 재생산해 지도자의 정통성을 자연스럽게 창조한다. 이를 통해 지도자는 빨치산의 지도자에서 현실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전통이 재창조된다. 정서적인 동일시의 일체감은 '김정은=김정일=김일성=신'이라는 상상의 단일체를 형성해 주민들을 복종하게 만든다. 바네겔(Vaneigem 2006, 172)은 상상의 단일체를 권력의 중력에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기제로 설명한 바 있다.

크레텐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상징조작으로서 '합리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이는 지배의 정당성을 북한 주민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 합리적인 설득에 사용되는 권력의 상징조작으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 사회주의 강성국가론 등 지배 이데올로기와 설득을 실천한 대상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따라 배우게 하는 방식, 그리고 주민들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형화하여 위계화된 지위를 만드는 '역할모델'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이념체계로서 정치리더십과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한다. 그런데 지배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특정 지배세력의 이익을 전체 사회 혹은 민족의 보편적 이익이라고 위장하는 속성을 갖는다(서재진 2006, 16-17). 표면적으로는 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조작을 통해 지도자와 당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주민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정일 애국

주의 등을 주민들이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으로 조작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강조해 왔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단결을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사상정신적 풍모의 핵심적 가치가 조직성, 당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로동신문』 1995/12/25). 이러한 사상정신적 풍모는 일상에서 주민들에게 무조건성, 자력갱생, 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데올로기를 실천할 규범으로서 사상정신적 풍모를 지닐 것을 평생 교육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제난과 일상의 불만, 불평의 원인을 지도자와 당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지도자와 당이 설정한 이데올로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간부와 외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모순을 혁명의 완성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체제의 안정을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인식하도록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영웅은 생산현장, 군대, 그리고 일상에서 체제에 대한 복종을 충실히 구현한 인물로써 모범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선전되고 있다. 북한에서 영웅은 체제의 의도와 목적을 맹목적이고 수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영웅을 따라 배우는 사람의 행동은 체제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견인한다. 특히,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 승리하는 영웅의 이미지는 현실을 극복하는 사회주의 인간형의 전형으로서 북한에서 지도자와 당에 충실한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완벽한 이상적 이미지로서 영웅을 창조하고 영웅을 어렵고 힘든 현실세계와 긴장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지도자와 당이 지시한 명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로 만든다.

또 다른 상징조작은 주민 각자에 맞는 정형화된 역할모델을 창조하여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설득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을 통해 역할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뒀을 때 물질적 혹은 정신적 보상을 받는다. 반면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나쁜 사례에 대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처벌을 받는다. 이를

통해 역할은 지속적으로 후대에 재현된다.

상징조작을 통한 설득은 당과 지도자의 의도와 목적을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무조건성’과 비판을 거세하는 ‘무비판성’, 그리고 설득되어 취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모범적 보상’이 제공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모범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한다.

3. 권위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권력수단은 권위이다. 권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 속에서 지배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 행위자의 행위와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이다. 권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권력을 지닌 지도자의 자질, 능력, 인격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권위의 원천으로 된다(최장집 편 2014, 112).

특히, 지도자의 자질, 능력, 인격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힘은 강제력에 기초한 지배에 비해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권위가 지도자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생각, 행동, 그리고 능력이 ‘진리’라는 판단을 행위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가 궁극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는 사회적 실천의 도덕적 기초가 되며, 행위자들은 권위의 영향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권위는 강제력뿐만 아니라, 설득과 상징조작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절대적 권위체로서 주민들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크게 신화적 권력으로서의 아버지와 현실적 권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장악하는 최고 영도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아버지로 인식되는 지도자의 모습은 살아 있는 신적인 존재로 신성시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구심력으로 주민들에게 자발적 희생과 복종의 정신을 은연중에 심어준다. 또한, 일체의 권력을 장악한 현실적 권력으로서의 지도자상은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한 물리적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도 심어준다. 이

와 같이 권력은 지도자를 신적인 존재 그리고 어버이라는 추상화된 이미지와 일체의 무력을 총괄하는 현실적인 최고 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강화된다.

현실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인민반 생활총화, 사적지 참배, 주어진 과업의 무조건 완수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남근우 2014b, 179-185).

첫째, 지도자는 주민들의 인민반 생활에서 여전히 호명된다. 인민반은 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동원과제를 하달하는 주거지 단위로 조직된 최말단 행정조직이다. 경제난과 각종 노력동원으로 인민반 회의에서 주민들이 과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장사를 나가 불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도자와 당의 지시사항이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특히, 인민반 생활총화에서는 개인의 행동, 사고, 말, 그리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도자의 교시를 인용해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민반 강연회에서도 지도자와 당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비사회주의적 행동과 사고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 지도자와 당에 대한 반대 행위와 사고는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도덕을 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둘째, 지도자의 권위는 지도자와 관련된 동상, 기념비, 사적지에 대한 참배, 답사 및 보수건설의 참여로도 표출되고 있다. 인민반회의나 공동작업의 경우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는 있으나 지도자의 생일, 기념일 그리고 정치행사에는 모든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보수 및 건설에서도 주민들은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북한 주민들의 의무로 되고 있다. 따라서 참배, 답사 및 보수건설에 나가는 행위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셋째, 지도자의 권위는 주어진 과제를 무조건 완수하는 무조건성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와 약화된 사회주의 도덕을 강화하기 위해 선군정치의 문화를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명령-복종체계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갖춘 당의 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가 등장하면서 주민들

의 일상에서도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조되었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주어진 과제의 무조건 달성, 자력갱생, 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정일 2000, 223).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군수공장, 주요기간산업, 외화벌이 기업소를 제외한 많은 공장들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인과 제대군인, 그리고 청년들이 생산과 건설, 그리고 농촌에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장비, 전력, 연료, 비료 등이 부족해 생산과 건설현장에 노동력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100일 전투, 150일 전투와 같은 돌격대식의 전투를 벌인다. 전투에 동원되는 군인, 제대군인, 청년돌격대는 동지애, 헌신성, 희생성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과업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내면화가 주어진 과제의 무조건 완수라는 행위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여전히 지도자의 권위를 추종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뇌물을 받거나 개인주의에 물든 간부들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권위를 추종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지도자의 권위는 김일성시대를 살았던 나이든 사람들이나, 외부정보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강하게 침전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지도자의 권위를 설득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민반장을 비롯해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정치사회조직의 간부들이다. 이들은 생활총화와 강연회 등을 주관하면서 지도자와 당의 지시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일반 주민들에 비해 높다.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행위는 물론 강제된 것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적어도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 설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으로 표출하지 않고 당 및 경제 간부나 외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생에 걸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사상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권위에 의한 지배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권위는

김일성에 비해 취약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김일성은 혁명, 체제수호, 자상한 아버지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권위를 갖게 된 반면, 김정일과 김정은은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앞세운 핵무력을 통해 강성국가 건설로 권위적 자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지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도자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데 있어 최고의 권위체이다.

IV. 결론

북한에는 여전히 깰리선의 노예들이 존재한다. 깰리선의 노예들을 구속했던 족쇄와 채찍 같은 강제력 이외에도 설득, 상징조작, 권위라는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수단들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삶 곳곳에 그물망처럼 편재되어 주민들을 체제질서에 순응하도록 행동과 사고를 제약한다. 이 점은 푸코가 파놉티콘(Panopticon)에서 주목했던 감시 메커니즘에 순응하는 죄수들의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같다.

즉,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수단을 갖고 있는 북한의 통치지배 질서는 핵심계층에서부터 적대계층에 이르기까지 거대하게 침투해 이들을 장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권력의 강제력이 가하는 두려움에 의한 복종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득, 상징조작, 권위에 의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도 한다. 지배질서에 순응해 순종하는 신체와 정신으로 스스로를 구속하는 북한 주민들에게서 집단행동을 표출하는 어떤 시도도 불가능해 보인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길들여진 야생마에 비유했던 라 보에티(2009, 56-57; 64)는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습관화된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은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독재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꿰뚫고 있다. 습관화된 자발적 복종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도 권력의 존재를 수긍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권력과 지배질서에 복종하는 자기순응적인 행위자로 재생산되

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의 권력은 대단히 효과적이고 완벽하다 할 정도의 통치기술들을 고안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권력에 복종하는 상황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켜 볼 수만은 없다. 북한 주민들이 선천적으로 노예적 근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수단들이 일상의 삶 곳곳에 편재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실 사회주의국가가 보여준 그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교묘하며 은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수단들이 약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시장화가 체제와 정치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추동하기에는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권력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시장화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고 지도자, 당, 체제에 대한 조직화된 집단행위를 추동할 수 없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은 그동안 인류를 한걸음씩 진보하게 만든 원동력이자 동물과 다른 인간성의 본질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자발적 복종에 체념하지 않고 그들의 집단행동과 변화를 지지하고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파편화된 권력수단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자체적인 역량만으로는 북한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파편화된 구속수단들을 해체 혹은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무임승차 현상, 정보부족은 주민들이 스스로 집단행동에 나설 역량과 세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정교한 지배수단들은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스스로 집단행동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자체의 역량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 외부로부터 권력의 파편화된 구속수단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북한 주민들이 이 구조적 조건을 자신들을 위한 의미 있는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철저히 관통하고 있는 권력의 강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자발적 복종을 유도해 권력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권력기제인 설득, 상징조작, 그리고 권위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력의 기제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영화, 대중매체, 이데올로기, 역할모델과 같은 권력의 수단들을 통해 지도자와 당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의 덕목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통제한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권력기제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 복종의 기제들을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와 물품들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북한의 권력이 관통하는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는 일이다. 특히, 일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북한의 공식적인 생활방식과 그러한 생활방식에서 이탈한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또한, 시장은 주민들 간의 사적 정보가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시장이 북한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기제로 작동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시장을 통해 주민들의 인민반 생활과 기타 조직생활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시장은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대항문화가 싹틀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협력과 같은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관계회복을 통해 시장으로 권력의 정당화 기제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유통시켜야 한다.

물론 시장화에 의한 주민생활의 향상과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확산이 개인의 자유와 체제변화에 대한 요구로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외부세계와 연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북한체제의 변화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권력의 정당화 기제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는 한 지도자와 당의 권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집단행동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영석 (2008). 『설득 커뮤니케이션』. 나남출판사.
- 김정일 (2000).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권헌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창비.
- 남근우 (2010). “북한 노동문화의 형성과 균열에 관한 연구: 공업화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pp. 159-183.
- _____ (2011). “북한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유일영도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균열.” 『동서연구』. 제23권 1호, pp. 221-255.
- _____ (2014a).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대항문화인가, 하위문화인가.” 『통일인문학』. 제58집, pp. 163-193.
- _____ (2014b).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현실 지속성.” 『아태연구』. 제21권. 4호, pp. 161-191.
- 라울 바네겔 (2006). 『일상생활의 혁명』. 주형일 역. 서울.
- 미셸 푸코 (1996).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사.
- _____ (1999). 『성의 역사 1』. 이규현 역. 나남출판사.
- 박관영 외 (2007).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한울아카데미.
- 박영자 (2009).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 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pp. 149-171.
- 반디 (2014). 『고발』. 조갑제닷컴.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재진 (2006). 『주체사상의 이반』. 진영사.
- 에티엔느 드 라 보에티 (2009). 『자발적 복종』. 박설호 역. 울력.
- 이우영 (2012). “김정은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pp. 69-92.
- 이우영 편 (2008).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한울.
- 이춘근·박상봉 (2011).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경제연구원.
- 장명봉 편 (2013). 『2013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 조영기 외 (2014). 『한반도통일 플랜B: 북한급변의 역동적 대응』. 한반도선진화재단.
- 조정아 (2011). “북한 주민의 ‘일상적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제7권. 1호, pp. 25-74.

- 조정아 외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조한범·황선영 (2013). 『북한 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통일연구원.
- 최봉대 (1999). “북한 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 pp. 233-302.
- 최장집 편 (2014).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박상훈 역. 후마니타스.
- 테다 스카치폴 (1989). 『국가와 사회혁명』. 한창수 역. 까치
- 통일연구원 (2014).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 프란츠 카프카 (2014). 『변신/유형지에서』. 박환덕 역. 범우.
- 홍민·박순성 (2013).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한울아카데미.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vies, James C. (1962).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No. 1, pp. 5-19.
-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tzioni, Amitai (1975).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 Gurr, Ted 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 Shaohua (2000). *Explaining Chinese Democratization*. West port, CT: Praeger.
- Ikenberry, J. G. (1988). “Conclusion.” Ikenberry, Lake and Mastanduno (eds.). *The State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219-247.
- Lasswell, Harold D. and Abraham Kaplan (1950). *Power and Socie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pp. 69-105.
-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pp. 1212-1241.
- Merriam, Charles E. (1964). *Political Power*. N.Y.: Collier Books.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owen, Henry S. (1996). "The Short March: China's Road to Democracy." *The National Interest*. No. 45, pp. 61-70.

Russell, Bertrandl (1938). *Power: A New Social Analysis*. New York: W.W.Norton.

Smelser, Neil J. (1962).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McMillan Press.

Wrong, Dennis H. (1988). *Power: Its Forms, Bases, and Us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기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년 12월 25일.

| 논문투고일 : 2016년 02월 24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3월 02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03월 21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1 (2016)

**The Politics of Power and
Obedience in North Korea:
Why North Korean Collectively don't Resist?**

Keun Woo Nam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at Why does not the North Koreans collective actions? North Korean society also exist conflicts and frustrations because where people live. However, conflicts and discontents with the North Koreans do not express a collective actions. Because North Korean's everyday life is to controlled by power means of the coercions, persuasion, image manipulations, authority. North Korean's capability alone is difficult to weaken the power means. Therefore it should seek ways to weaken the power means to control collective actions of North Korean. But realistically it is difficult to weaken the coercions. Therefore, the most realistic approach is a way to weaken the structure of the persuasion, image manipulations, and authority.

▪ Key words: Power, Obedience, Collective Actions, Resistance, Authority